

2009년 미일정상회담 감상법 - 오바마와 아소의 '동아시아초석론' 과 오자와의 '미군축소론'

양기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I. 미일정상회담과 오자와 발언
- II. 일본 민족주의의 부활
- III. 미국이 일본의 민족주의를 보는 관점
- IV. 미중일외교와 한국외교

I. 미일정상회담과 오자와 발언

2009년 2월 2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수요를 진작시키고,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동맹은 동아시아 안전 보장의 초석(the cornerstone of security in East Asia)'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일정상회담 당일,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축소론'을 발표하였다. 오자와는 1993년 일본정계개편을 주도하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와 재군사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통국가론'을 처음 제창한 인물이며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시 되는 정치가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의 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오자와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전략적으로 미국의 극동에서의 존재는 제7함대로 충분하다'며 '이후에는 일본이 스스로 안전보장과 극동에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자와 대표는 또 '미국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도 확고한 세계전략을 갖고 적어도 일본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할을 더욱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역할 축소를 당연시했다. 오자와 대표는 2월 17일 방일 중이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도 '미일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동맹은 한쪽이 한쪽을 따르는 종속관계여서는 안 된다. 대등한 파트너십이 있고 나서야 동맹이 있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주일미군지위협정 개정, 미군지원예산 검증, 오키나와(沖縄)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을 요구해왔고, 미군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도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1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오자와의 이번 발언은 지금의 일본에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확실히 일본 민족주의는 부활하고 있고 일본은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민족주의의 부활과 미일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래의 글은 필자가 얼마 전에 다른 곳에 기고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II. 일본 민족주의의 부활

2002년 10월,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2003년 2월 중순 경 일본 방위청 장관이었던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이 필요하다면 자위를 위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북한에게 경고했다. 고이즈미 내각의 많은 각료들은 이시바의 발언을 지지했고, 2002년 중반 당시 내각 관방장관이었던 후쿠다 야스오는 '헌법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도 '3-4천 개의 핵탄두를 생산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에 일본은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일본 자위대는 2004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2억 달러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는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예산의 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2000년 일본의 자위대가 필요할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헌법 9조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전체 여론의 41%이었고 2001년에는 그 수치가 47%로 증가했다. 2003년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대표적인 우익 정치가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약 70%의 지지율로 당선되었고, 2003년 9월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 9조 수정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확실히 '보다 민족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부활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의 수정, 헌법 9조의 수정논의 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압력이 오히려 일본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60년 전의 행동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죄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일본의 여론은 점차 일본정부가 해야 하는 지속적인 사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일본인들은 역사교과서의 수정 또한 일본의 과거를 영광스럽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원하는 만큼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 9조의 수정은 일본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위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방어적인 조치로 이해하는 일본인들이 많다.

둘째, 인구분포상의 변화가 민족주의 부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과 군국주의의 공포를 기억하는 세대는 나이 들어가거나 죽고 일본 경제성장의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 그 과실을 향유해온 젊은 세대가 일본사회의 주역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강한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이 세계와 아시아에 기여한 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일본은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장기적인 경제침체도 일본의 민족주의의 대두 배경이 되고 있다. 오랜 경제침체는 일본인들에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오랜 경제침체를 겪게 되자 미래의 삶의 질이 현재보다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해졌다. 이들은 일본경제의 부활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만성적인 경제침체에서 사회적인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 때 민족주의는 일본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경제개혁의 추진력을 제공해준다.

넷째, 중국의 급부상이 일본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세계의 자본들은 중국을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평가하면서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국방예산을 2003년 기준으로 과거 14년 동안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로 늘려오면서 일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센카쿠 열도 문제 등으로 긴장과 대립의 관계를 연출하였다. 중국의 잠재적인 안보위협 혹은 중국과의 경쟁의식은 일본의 민족주의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미중관계의 격상에 따른 일본의 상대적인 소외감과 불안감도 일본의 민족주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전략변화가 일본의 안보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자위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자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보호자였다. 그런데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자신의 전략적 관심을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전환시키면서 일본 등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과정과 인식의 공유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사적, 전략적 자원들을 중동으로 집중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공백, 불안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 향상과 군사적인 국제공헌을 장려하고 요구해온 것도 미국이었다.

여섯째, 북한 변수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요인이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핵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기 이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주장들이 이제는 정치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태연하게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 위협이 북미대화 와 6자회담 등을 통하여 장기화되어 가면서 일본인이 느끼는 안보위협은 점점 증폭되어 갔다.

일곱째, 일본의 국제적 공헌에 걸 맞는 국제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계심과 비협조 혹은 반대가 일본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이었고 아시아 신흥시장과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국제연합,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많은 주요 세계기구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일본이 원했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아시아 국가들의 비협조 혹은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러한 인정(recognition) 욕구의 좌절은 자신의 정체성과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욕구를 더욱 크게 확대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Ⅲ. 미국이 일본의 민족주의를 보는 관점

미국은 일본의 민족주의를 과거로 되돌려놓을 수 없고 또 되돌려 놓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도 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의 온건한 민족주의적 욕구는 격려하거나 충족시켜주면서 핵무장이나 중국과의 노골적인 군비경쟁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민족주의는 차단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일본의 온건한 민족주의를 어떻게 격려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인가? 온건한 민족주의 세력들이 원하는 ‘자기 정체성’, ‘국제적인 인정과 정당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존심과 안전’의 욕구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거나 포용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과격한 민족주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신중하게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수정, 헌법9조 수정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점과 주장을 이해하고 관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본심은 한국, 중국과 같은 일본의 주변 국가들이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거나 일본과 대립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아시아 역사마찰 그 자체가 급진적 일본 민족주의의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이 왜 동아시아 역사 마찰에 대해서 그 동안 ‘침묵’ 혹은 ‘무관심’의 반응으로 일관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일본의 자위능력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돕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군에 대한 지원능력 증강이라는 면에서도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 일본의 자위능력이 향상되어 안보 불안감이 줄어들면 당연히 과격한 민족주의 세력은 축소될 것이고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세 번째로는 격상되어 가는 미중관계(美中關係)에서 일본이 소외감이나 쇼크를 받지 않도록 일본을 배려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제2의 닉슨 쇼크는 일본의 과격한 민족주의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일본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협력하면서 일본 민족주의자들의 관심이 건전한 경제개혁을 통한 일본의 경제력 회복으로 집중되기

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2007년 아베 총리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면서 단호하게 개입했는가? 필자는 미국이 2007년 아베 사례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 민족주의에 대한 미국의 ‘이중 기준’, 즉 온건한 민족주의는 수용하고 과격한 민족주의는 차단한다는 미국의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야스쿠니는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에 해당하고 이를 방문하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일본이 과거사를 새롭게 왜곡한다기보다는 과거 잘못에 대한 서술의 양을 줄이는 수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주권국가 일본의 정당한 권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와 자민당 우파의 움직임은 야스쿠니, 역사교과서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급진적 민족주의’의 사례로 미국에게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07년 위안부 사례는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과 사죄라는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을 수정하는 것이며 이는 전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극우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며, 동아시아 국가 간에 ‘역사에 대한 기억과 사죄의 언어’ 사이의 어렵게 형성된 균형과 현상유지에 대한 위협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노 담화의 수정은 일본의 급진적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도 자극하여 동아시아 ‘역사전쟁’과 급진적 민족주의의 득세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태로 이해되었을 수도 있다.

2007년 아베 총리의 위안부 사례를 통하여 미국은 일본에게 민족주의와 관련한 미국의 원칙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일본이 더 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사죄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사죄를 철회하거나 지금의 수준에서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메시지 혹은 동아시아의 역사와 기억의 정치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본다면 이번 오자와의 ‘미군축소’ 발언은 미일동맹의 급격한 현상변경을 요구하는 그 급진성 때문에 미국과 일본내 온건세력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겠지만 미국은 오자와 발언의 문맥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의 온건한 민족주의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잘 계산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IV. 미중일외교와 한국외교

한편 미국은 일본의 부활하는 민족주의가 격상되고 있는 미중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갈 것으로 보인다. 2월 21일, 중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부와 만남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적극적인 협력시대가 열렸다’면서 ‘양국은 전지구적인 문제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고,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와 같은 지역 안보문제는 물론 세계 금융위기, 지구온난화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클린턴 장관이 20일 ‘계속 거론해야 하지만 (중국을) 강박함으로써 경제위기, 기후변화, 안보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인권문제를 대중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전달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사실상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미중관계에 부담을 주는 수준의 급진적 일본 민족주의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환기의 미-중-일 삼각관계가 우리의 대일외교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째, 미중일 삼각관계의 문맥에서 한국은 (사안에 따라서는 이 삼각관계의 지역차원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로부터 소외당하는 상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외교는 미중일의 삼각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역사망언이나 과격한 민족주의적 언행에 대해서는 중국과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단독 행동은 한일관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문제해결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아시아 역사분쟁에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환상은 갖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민족주의적 요구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내 NGO와 의회 차원의 활동에 주목해야 하고 여기에서는 한일관계의 특수성보다는 인권과 같은 보편성에 입각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제 한국 외교는 미중일 삼각관계의 동태성을 주시하는 광폭(廣幅)의 외교시야(外交視野)를 가져야 한다. (2009/03/05)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